

칼럼

김화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코로나19 극복의 관건, 투명성과 국제공조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이후로 세계 최대 학술연구 사이트 SSRN은 코로나 관련 연구논문들을 따로 모아 홈페이지에 바로 연결시켜준다. 매일 새로운 코로나 연구논문들이 업로드되고 있다. 그중 규제연구 분야 논문 한 편이 코로나 극복에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 눈에 띈다. 이 논문은 위험 규제 연구자들인 국립대만정화대 린칭푸(林勳富) 교수 포함 3인의 대만 학자들이 쓴 것이다. 대만의 '성공' 사례를 소재로 했다.

인구 약 2400만인 대만은 4월 22일 기준 확진자 426명, 사망자 6명이다. 대만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단호한 조치를 취했던 나라다.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 우선, 대만은 국제적으로 고립된 지위에 있고 세계보건기구(WHO)의 일원도 아니다. 개별적으로 생존해야 한다. 둘째, 대만은 2003년 사스(SARS) 사태 때 큰 희생을 입었고 정부는 혹독한 비판을 받

았다. WHO의 지원은 미약했고 73명의 인명 손실을 냈다. 셋째, 대만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정치적으로 불편하다.

대만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제어하는 데는 행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가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대만이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인 민주주의 이념과 배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한다. 행정부의 권력 확장과 광범위한 권한 행사는 위기가 끝나도 잔존해서 뉴노멀이 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입법, 사법 영역을 상대적으로 약화시켜 인권 침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높다.

그러나 대만은 첫째, 신뢰성 높은 정보에 근거한 위험평가, 둘째,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소통, 셋째, 선제적인 위험관리를 통해 코로나를 성공적으로 제어함은 물론이고 정치적인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 특히, 필수적 의료역량을 최적화했고 국

경통제와 여행규제를 실시했으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감시감독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의료기록, GPS를 사용한 이동기록을 포함하는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서는 물론 인권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대만의 성공에는 '코로나19 특별법'이 신속하게 제정되고 국회가 행정부에 방대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한다. 특히 국회는 행정부의 재량을 보장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권한위임을 모호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러나 동시에 정부에게 일일 브리핑을 포함한 고도의 투명성 유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확보했고 정부가 하는 결정의 정당성을 얻도록 조치했다. 가짜뉴스의 전파에도 강력하게 대처했다. 이 논문의 연구자들은 대만의 실적이 중국식의 권위주의적 방식에 대한 선택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분위기 하에서 대만은 지

난 3월 18일 미국과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상호협력에 천명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은 사실상 미국대사관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재대만협회 명의로 작성되기는 했지만 미국이 1979년에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을 떠난 이래 최초의 공식 외교문서다.

투명성을 담보로 강력한 규제를 실시한 대만의 성공사례는 그 자체로 고무적이다. 한가지 우려는 대만의 성공이 '대만적'이라는 점이다. 대만은 본의 아니게 고립적인 국가이고 WHO체제 밖에 있다. 그 때문에 초기부터 그에 걸맞게 '걸어 잡그는' 조치들을 취해버렸고 성공했다. 이 모델이 향후 높이 평가받을 가능성이 다분히 높아 보인다.

코로나19 이후의 세계가 분리되고 자족적인 국가 단위로 편성된다는 전망이 많다. 1648년 베스트팔렌체제로 회귀하는 것이다. 국제기구 회의론도 부상할 것이다. 양자대전의 결과로 무수히 많은 국제기구들이 창설되어 전쟁의 재발을 막는데 기여했지만 이번에 WHO가 보여준 대로 전문분야에서는 그 역할이 기대에 못 미치기도 한다.

그러나 기존 체제에 대한 실망은 어쩔 수 없다 해도 이른바 '헬스거버넌스'에 대한 국제공조는 새로 시작되어야 한다.

社 說

효과 큰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전남도가 농업과 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한 '농어민 공익수당'이 순조롭게 지급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23일 전남도는 따르면 당초 농어민 공익수당 60만원을 오는 5월과 10월에 나눠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일시불로 지급한다. 현재 도내 22개 시·군 중 대상자 선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장흥군을 시작으로 도내 11개 시·군이 이미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개시했다. 나머지 11개 시·군 역시 늦어도 5월 초까지 지급을 마칠 계획이라고 한다.

특히 진도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농어민 편의를 위해 지역 농협과 합동으로 마을을 직접 방문해 배부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진도농어업인들은 1만원 상품권 60장이 든 봉투를 받으면서 "어려운 시기에 농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지역사회사랑을 나눠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면서 기뻐했다고 한다. 지역상가도 활기를 찾아 가는 분위기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시·군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가게 운영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상품권이 풀린 도내 일선 시·군 소상공인들은 매출액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번기를 맞아 농작 관매점들도 지역화폐로 농자재 구입대금을 계산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외상이 줄어 상업활동에 보탬이 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농어민 공익수당이 뿌리를 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농어민들의 지역화폐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당장 농약판매점을 비롯해 식당, 미용실, 주유소 등 농어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업종으로 가맹점이 확대돼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직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하지 못한 지자체들도 신속히 지급해서 위축된 골목상권이 조기에 회복되길 기대한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노리는 검은 악마의 손길

현재 전국 지자체별로 코로나19관련 긴급재난생활비 또는 지원금제도가 확대 시행되거나 시행 예정인 가운데 한푼이 아쉬운 주민들에게 지급중인 지원금이나 상품권, 지역화폐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문자 및 스미싱범죄가 발생하면서 피해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사례를 일례로 들여보자면 피해자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명목 상품권이 도착했다며 확인을 요구하는 미끼 문자를 보내온뒤 문자에 명시되어 있는 인터넷 주

소를 클릭하여 악성앱을 설치하게끔 유도해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신종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금전적 피해지원이 본격화 되면서 최근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된 코로나19 재난지원 관련 스미싱 의심신고만도 130여건에 달한다는 통계수치도 나온바 있고 재난지원금이 곧 본격적으로 지급될 예정이어서 간절히 주민들의 심리를 악용한 교묘한 수법의 스미싱 및 스텔문자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릴것

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나에게 날아온 한푼의 재난지원금 지급 문자는 솔깃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의 지원금 소식이 무엇보다 절실한 사람들에게는 너무 반가운 문자일터이고 아무런 의심없이 문자를 클릭하는 착각의 늪에 빠질 위험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문자 문자 스미싱 피해예방 답은 하나다. 상품권의 경우 결제할 때마다 결제완료 확인문자가 발

송되지 않으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조금이라도 수상하다싶은 문자는 절대 열어보지 말고 즉시 삭제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자면 스마트폰의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나 문서에 대한 설치제한 기능을 활용하는 보안설정을 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수있을 것이다.

여기에 최근 코로나19관련 정보를 가장한 악성 이메일도 유포되고 있는 만큼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언론에 보도된 지역화폐나 상품권을 사고파는 일명 강행위도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당장의 현금이 필요하다고 불법 현금화는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

김덕형 / 장성경찰서 정보보안과

생활정보전화

-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 응급질병상담 1399
-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 여성 긴급전화 1366
-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 기상예보 131
- ▲ 법률구조상담 132
- ▲ 인광 알콜류 상담센터 222-5666
-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 수도 고장신고 121
- ▲ 전기고장 신고 123
-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기 0021 (일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기사제보 (062) 971-7400 팩스 (062) 222-5547	회 장 · 발 행 인 · 편 집 인 김 평 호 편 집 국 장 직 무 대 리 서 선 옥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62가길 16-1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된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